

윤석열 지지자들 ‘폭동’ 이 남긴 흔적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제공>



‘법원 폭동’ 尹 지지자 ‘엄벌’ 피하기 어렵다

경찰, 습격 시위대 46명 등 구속 원칙 두고 수사
다수가 흉기 들고 경찰 상해… ‘특수공무방해 치상’
형법상 ‘소요죄’ 적용 가능성도… 1년 이상 징역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를 일으키는 폭도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다수가 다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은 물론, 집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소요죄까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력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내 집가와 청사 외벽들도 심하게 훼손됐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구속수

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 방해, 월당행위, 공수처 차당방해 등 혐의로 붙잡힌 40명을 포함하면 연행된 시위대는 모두 86명에 달한다.

법조계는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전대법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대법원 양형 기준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 뿐 아니라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 건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전북공노조·한노총 “부정청탁·갑질 지방의원 규탄”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산하 연대 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최근 불거진 부정청탁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이 공무원에게 수 십억 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도의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갑질과 청탁을 일삼는 행태를 비판하고, 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원을 회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전북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일부 도의원들의 이권개입은 어제로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알면서도 쉬쉬하고, 심지어는 예산삭감, 보복성 자료요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성명서를 통해, “특정 민원인이나 단체에 특혜 제공을 강요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산하 연대 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최근 불거진 부정청탁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상민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은 “갑질로부터 우리 도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검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북자치도의회 40명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내부 견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윤리위의 심의 결과가 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주당 도당을 항의 방문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년 동안 갑질과 인사청탁, 보복성 자료요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A 도의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를 넘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체포됐으니 이제 구속돼야”

도민들,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18일, 전주객사 공패지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북도민들은 즉각 윤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라고 이름붙은 이 집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돼 벌써 6회차를 맞았다. 장기간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과거 촛불 집회보다 조금 적은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매서웠다.

사회자가 구호를 외치자 지나가는 학생들도 손뼉팔을 든 채 길을 지나며 함께 큰 소리로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도로변 한 켠엔 ‘윤석열 파면’이라는 현수막이 천막처럼 걸려 있고, 천막 안으로는 유성펜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하고픈 ‘분노의 말’을 적으라는 것인데 “우리 손녀에게 독재국가 물려줄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우리만이 만들 수 있다”와 같이 이 사태에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날 촛불집회는 참여자들의 자유 발언이 주를 이었다. 시민단체 대표, 평범한 20대 대학생 등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발언대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로 향했던 조배숙 의원, 그는 오직 자기 안위만 위해 행동한다”며 “같은 당 소속인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어떤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이 ‘탄핵을 바라는 세력이 배후조종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를 누가 고발했느냐? 여기 앉아있는 시민들이, 180만 도민들이, 5000만 국민들이 했다. 당장 조배숙의 국회의원직을 잘라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아쉬워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며 신속히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 및 탄핵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다. /김재훈 기자



박정희 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 선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책지원 인력 업무 구체화 및 표준화, 체계적·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 대정부 건의안 제출을 통한 지방자치치법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올해 6월 말까지 운영된다.

박정희 의원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 도민들을 위한 특례 발굴 및 특례실행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지원하여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을 넘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첫 번째 내란 특검법 당시엔 여당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부처진 무기명 재표결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내렸지만 여당 자체 특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줬다. 이로써 윤석열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특검법안을 두고 5시간 이상 ‘말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안은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였지만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내란·외환 행위 고소 고발 사건은 삭제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던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57가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 안에 있던 관련 인지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뉴시스

민주, 법원 폭동에 ‘제2차

“내란 현실화…현안 질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며 ‘제2차 내란’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며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난동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일(20일) 오전 10시에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돼 있는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법원 폭동

尹 지지자 엄중한 처벌을”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제2차 내란 사태”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은 이날 국회 소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차 내란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현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